

제203차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서면 질문·답변서

윤 태 천 의 원

제203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윤 태 천 의원

본오1동, 본오2동, 반월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윤태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김철민 시장님을 비롯한 관제 공무원과 언론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부도 바다향기 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대부도를 중심으로 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도바다향기 테마파크 추진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대송단지 공유수면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산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제2조에 규정에 의하면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소유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와 장래의 공유수면매립부지에 대한 사업시행자 참여 및 소유권부지 등의 우선권 확보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총사업비 약 40억원의 육박하는 투자예산이 의회를 통한 기본적인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집행부의 편법적 결정에 따라 무리하게 추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무상으로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는 대송단지는 소유관청으로부터 2년간의 사용승인을 받아 2014. 6월까지 기간만료로 앞으로의 무상사용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업추진과 관련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테마파크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자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및 공유수면 임시사용권자인 경기도지사와 매립지의 목적사업 및 임시사용승인 내용과 테마파크 사업의 부합여부, 소유권 확보 등에대한 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안산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단위사업별로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이행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다향기레마파크 사업에 대하여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자료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이와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송단지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대규모간척지 이용에 자치단체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가능함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 대송단지 860만평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용역 진행과 관련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경기도 등 상급 기관에서 추진한 용역결과는 무엇인지, 용역기간, 용역의 내용적 범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송단지 자체가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활용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게 된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송단지 컨설팅 용역의 결과로 어떻게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어촌진흥공사와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인지 구체적
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록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13. 4월 현재 우리시는 등록외국인이 45,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에게도 지방세 및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2013. 6. 28 현재 지방세 53,428건의 6억9천5백만원이, 과태
료는 2,858건 8천4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등록외국인 정책에 관련한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외국인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한 채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체납액을 징수할 방법이 없으므로
등록외국인 체납세를 징수할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가 매년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서 연간 2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지원에도 등록외국인은 시민의 기본적인 의무인 세금 납부조차 해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문화의 확대,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인의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주도에서 민주도로의 정책변화의 필요성과 복지적 관점에서 주민 복지국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는 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 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윤태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임시사용 승인내용과 부합한지 여부와 소유권 확보 등에 대한 협의결과와 안산시 입장
 -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 관리부서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 기부채납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사업은 대부도 지역에 꼭 필요한 체류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시작한 사업으로써 매립권자인 농림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여러차례 협의를 거쳐 임시사용 승인을 받게 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대송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시로 협의하면서 진행되는 관제로 승인사항에 위배되는 일은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 향후 지속적인 사용권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 스스로가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투·융자 심사여부는 안전행정부가 제공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과 「지방재정법」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이미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 : 시민공원과 2012년도 예산(971,896천원)과 2013년도 예산(813,105천원)에 대하여 2012.10.24투·융자 심사 완료, 각 과에 편성된 나머지 예산은 투융자심사 대상 아니라고 판단함.

- 현재 「대부바다향기 테마파크」 종합관리는 시민공원과가 전담하고 있으며 기부채납된 시설물 또한 시민공원과에서 함께 관리하면서 각종 보험가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송단지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상급기관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는 무엇인지와 용역기간, 내용적 범위 설명
 - 농림부 소유인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이유
 - 용역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는 농림부는 현재까지 토지이용 구상안을 발표하고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경기도와 국토부에서는 각각 에어파크, 그린에너지 생산단지 계획을 수립한바 있으나 농경목적과는 맞지 않는다는 농림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림부가 발표한 토지이용 구상안을 존중하면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 예를들면 「바다향기 테마파크」와 같은 농어촌 휴양 관광단지와 와인 제조용 포도 재배단지, 기능성 식물 재배단지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의견이 집약된 ‘대송단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면 농림부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대송단지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촉진하는 한편 우리 시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합니다.

□ 세번째로 질문하신 『등록외국인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질문 요지 > —

- 등록외국인이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한 채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체납세를 징수할 구체적인 방안은?
- 우리시는 등록외국인에 대해 외국인주민센터를 통해 연간 2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기본적 의무인 세금납부를 해태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대안은?
- 외국인 관련 환경과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바 담당부서의 주민복지국 편성, 민주도의 정책사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 먼저, 첫 번째, 두 번째로 질문하신 등록외국인의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5월말 현재 약 46,000여명에 이르고, 외국인에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은 695백만원으로 우리시 과년도 총 체납액 40,189백만원 대비 1.7%,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은 843백만원으로 총 46,281백만원 대비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지방세 및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추적하여 자동차, 부동산, 예금계좌 압류등 채권확보를 통하여 강제징수하고 있으나,

- 외국인 체납세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에는 체납세액이 소액이고 이를 체납한 외국인들 대부분이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에 한계가 있습니다.
- 현행 제도하에서는 체납세 징수의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방세 정기분 부과기간 중에는 원곡동 주변 상가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 외국어 납부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하여 외국인 스스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으며,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등록 외국인이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나 출국할 경우에는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안등 소액의 체납세액도 징수 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 등에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요청하여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천 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등록외국인 정책에 관한 질의 중 「다문화 확대,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인의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외국인 주민센터의 역할 재정립,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정책변화의 필요성, 복지적 관점에서 주민복지국으로 재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다문화 확대, 결혼이민자의 증가, 외국인의 복지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한 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정책변화의 필요성과 복지적 관점에서 주민복지국으로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 우리시는 2005년부터 외국인 지원 전담인력 배치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인프라 구축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공동체 도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 중심도시로서의 위상확립과 상호협력의 다문화 정책을 수립,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 24개 도시의 다문화도시협의회를 구성하고,
- 금년도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2박3일)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다문화 국제 심포지엄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외국인 다문화 정책은 지역내 민간단체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제를 통한 상호 협력 보완적인 관계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는 민·관협의체의 다양한 의견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성공 모델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주민 센터는 현재 행정국으로 편제되어 있으나, 업무성격상 주민복지국에 편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 업무의 효율성, 국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고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조직 개편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